

## 주요국 여론과 공공외교

- 3 <권두논문> '국민외교'의 출발과 가야할 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 7 미국내 여론 동향과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22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안  
김상규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37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 징용공 문제 관련 중앙 일간지 보도로 본 對韓 공론  
고바야시 소메이 (니혼대학 부교수)

## 미국내 여론 동향과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미국의 일반 국민도 북한의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일반 국민을 더 이상 '지식' 공공외교나 '문화' 공공외교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수 없으며 그들과 우리의 정책에 관하여 소통하는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은 북핵의 위협이나 한미동맹의 중요성, 북한이 비핵화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파를 초월하여 공통된 인식과 단합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는 돌발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조치로 북미 수교나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는 지지하지만, 경제적 지원은 주저하며 주한미군의 전면적 철수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국의 대한민국 인식 변화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안

김상규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인 유사성, 지리적인 근접성, 역사적인 중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국가관계보다도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이 가져온 군사적 위협의 감소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주변국들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였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목표로, 중국은 개혁 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성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 같은 상호 간 전략적 선택은 1992년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고, 이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견고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었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 간의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영역의 정체성 문제가 양국의 부정적 인식을 점점 더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사드 배치 문제는 한중 수교의 역사를 사상누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현재 한중 사이의 부정적 인식의 팽배는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익상관자이다. 따라서 표면적 사안뿐만 아니라 잠재적 상황까지도 포괄하는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한중 수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한민국 인식 변화의 근본적 기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연구이다.

##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 징용공 문제 관련 중앙 일간지 보도로 본 對韓 공론

고바야시 소메이 (니혼대학 부교수)

2018년 하반기 이후, 특히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이후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가 어떻게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보도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 내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앙 일간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비판에는 온도 차이가 있거나 논리 구조에 차이가 있다. 일본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일본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공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중앙 일간지 보도가 잘 보여주었듯이 한일 간에는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고 일본 사회 안에서도 역사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역사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일 양국이 감정을 넘고 과거를 극복해서 협력과 발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큰 지도를 그려 낼 필요가 있다. 그 지도를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물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권두논문〉

## ‘국민외교’의 출발과 가야할 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촛불시민혁명을 정권의 뿌리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뿐 아니라 외교영역에 있어 ‘국민주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해 왔다. 이는 주권자 국민을 대표·대변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민의 출현을 의미한다. ‘국민외교’도 이런 맥락에서 외교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국민외교는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과제 중 96번째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국민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전통외교와 공공외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글로벌 트렌드와 조응할 뿐 아니라, 정책비전으로서 시대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국민외교는 공공외교보다 훨씬 더 진전된 인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공공외교는 타국 국민상대로 벌인 정보제공을 통한 홍보 또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전(propaganda)적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국가중심에서 벗어나 타국 국민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로 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확대되면서 자국 국민 역시 외교의 객체나 주변이 아니라 외교의 주체이자 인적 자산으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향한 적극적인 소통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실천하는 예는 별로 없고 대국민 설명이나 공공외교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국민외교는 전례 없는 선구적 시도이며,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이 이를 통해 새로운 외교 트렌드를 이끄는 리더 국가로 등장할 수도 있다.

국민외교는 간단하게는 ‘국민 참여외교’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합의를 근간으로 국가와 국민의 외교가 통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외교에서 이뤄지는 소통은 정부에서 국민으로 향하는 일방적 성격이 매우 크고 정부가 사업을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공모하여 참

여를 유도하는 형식이 다수를 이루었지만, 국민외교에서는 정부와 협업하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외교와 공공외교 차이〉

유형	국민외교	공공외교
정의	- 대국민 소통을 통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합의를 근간으로 정책 수행 - 전통 및 공공외교의 국내적 기반 조성	- 타국의 대중을 대상으로 영향력 행사 및 국익 증진 - 전통외교와 국민외교의 중간적 성격
주체	- 국민주도, 정부 협업	- 정부 주도, 민간 협업
소통	- 정부와 국민 쌍방향 소통	- 정부의 일방적 소통
발전 방향	- 국민이 외교의 중심 - 국민 외교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이 직접 입안하고 외교정책 추진	- 국민이 수동적인 홍보의 대상에서 관계구축을 위한 소통의 대상 - 국민참여형 공공외교사업 실시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민외교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존재한다. 먼저 오늘날 외교의 개념이 아무리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훈련받지 않은 비전문가 국민이 외교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외교가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현실세계에서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게다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민외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여전히 정부가 국민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여전히 정부의 홍보를 위주로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연구용역, 국민제안 공모, 언론 대상 설명회, 국민외교 홍보사절 위촉 등은 굳이 국민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이 없더라도 기존에 외교부가 해 온 사업들과 큰 차이가 없는 정치적 구호라는 것이 단순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국민외교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작은 아무래도 대국민 소통인데, 이조차 못하면서 국민 주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 소통보다는 지속가능한 소통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도구인 SNS를 예를 들면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소통의 폭을 대폭 넓혀야 한다. 최근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을 뜻하는 ‘스낵 컬처’에 발맞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에 카드뉴스 제작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게시하면 짧은 층의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 이외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의 채널을 이용해 정책에 관련된 문의나 질문을 받고 챗봇(Chatbot) 등의 기술을 이용해 외교에 관한 자료를 적극 제공할 수도 있다. 오프라인도 간과할 수 없는데, 찾아가는 외교 실현을 위해 외교부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설명회, 타운홀 미팅에서 장관과의 대화

등을 실시해서 기존 외교의 폐쇄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 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인데, 외교정책의 제안부터 추진 과정, 그리고 그 이후 결과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참여와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 외교부 내부에서만 논의하던 의제들을 민간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외교 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슈들, 예컨대 위안부문제, 남북 기본협정, 위험국가 여권 사용제한 문제 등을 두고 국민외교 참여단이 속의 과정을 거친 후 외교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외교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사례로 신고리 원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다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론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했었다. 이외에도 외교부 협력대학을 지정해 국민외교동아리를 운영하고, '국민외교관' 자격증 부여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소셜크라우드 펀딩을 응용한 '국민외교공감펀딩'도 혁신적으로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스토리펀딩'은 베트남 전쟁 피해 사과를 위한 프로젝트에서 135일 간 약 3천만 원, 코피노 취재를 위한 펀딩에 43일간 천6백만 원이 모금된 것을 볼 때 국민의 외교에 대한 참여 가능성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외교부와 국민외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및 국민들과의 상시적 정책소통 채널 가동을 위해 '국민외교 포럼'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이자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의견을 나누고, 정부 측에 외교정책에 대한 조언을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주제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단순 참여단과는 차이가 있으며, '민-주도 관-협력'의 형태로 실시되기에 자율성이 보장되며 이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포럼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연 이러한 국민외교는 실현가능할까? 가능하며 반드시 성취해야할 목표다.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문제는 전통적 외교의 관점에서는 논란이 없지 않지만 이는 정책과 관련된 매우 생산적인 논란이 될 것이며, 최소한 이 정도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애초에 국민외교센터까지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국민이 직접 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만들어짐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국민외교가 실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는 그동안의 과오를 벗고 위민(爲民)외교이자 의민(依民)외교로 나아가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외교부 정책

은 대국민 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삶이나 의견과는 괴리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외교는 국민이 직접 외교 정책을 제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정책 실행에 대한 지지가 확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외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약력

■ 김준형

現 한동대학교 교수, George Washington Univ.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임

# 미국내 여론 동향과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1. 증가하는 대미 공공외교의 필요성
2.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미국 국민의 인식
  - 가. 한반도 관련
  - 나. 외교정책
    - 1) 2017년 조사
    - 2) 2018년 조사
3.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 가. 엘리트 중심 공공외교의 한계
  - 나. 일반 국민 대상 공공외교의 필요성
  - 다. 디지털 공공외교의 필요성과 한계

## 1. 증가하는 대미 공공외교의 필요성

- 미국은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이고, 특히 우리로서는 경제적, 안보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협력 파트너. 한때 한미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적도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현실이 우리의 인식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됨
  - 트럼프는 후보 시절 한미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FTA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시하였고, 그러한 견해를 가진 트럼프의 당선은 한미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유권자가 소수가 아니었음을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나 일부 미국 국민이 한미관계에 대해 가진 부정적인 견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간의 대미 외교가 워싱턴 중심이었기 때문
  - ‘워싱턴 아웃사이더(Washington outsider)’ 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워싱턴 내 정치인이나 워싱턴 내 싱크탱크가 미국 일반 국민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 이제는 워싱턴뿐만 아니라 워싱턴 밖에서 들리는 미국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과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
- ※ 미국 정치에서 워싱턴 아웃사이더가 등장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종종 반복되는 현상. 과거에도 워싱턴 아웃사이더가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거나 대통령에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선거의 판세를 바꾼 경우가 발생
  - 70년대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당시로서는 워싱턴 아웃사이더였던 지미 카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92년 대선에서는 NAFTA를 반대한 기업인 로스 페로(Ross Perot)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18.9%를 득표함으로써 당시 재선을 꿈꾸던 조지 H.W. 부시가 낙선되는데 기여

**비핵화협상을 진행 중  
인 지금 '북핵' 공공외교  
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 미국 공화당 내 '티 파티 운동(tea party movement)'의 발생이나 기존 공화당과는 거리가 먼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인기를 얻는 현상 등은 미국의 전통적인 정당정치에 변화가 오고 있는 조짐일 수도 있음
-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지금의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내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함. 즉, 대미 '북핵' 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대통령 또한 여론 제약 아래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이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기 때문
-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국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고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함

## 2.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미국 국민의 인식

### 가. 한반도 관련<sup>1)</sup>

-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이 당면한 '심각한 위협(critical threat)'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이 2017년에는 75%까지 달했다가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난 2018년 7월에는 59%로 감소(참고로 응답자의 66%가 테러리즘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선택)
- 2018년 7월 조사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간에 인식격차가 사실상 부재
  - 공화당 지지자의 61%, 민주당 지지자의 62%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 응답자의 경우 53%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
  - 북한의 핵을 '중요하지만 심각하지 않다(important but not critical)'라고 대답한 비율은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32%, 민주당 지지자도 32%였고, 무당파는 36%에 달함

1)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에서 2018년 7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https://www.thechicagocouncil.org/publication/american-public-remains-committed-defending-south-korea>.

-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지지도는 74%로서 역대 최고였으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 남한의 방위를 위해 미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64%로서 사상 최고를 기록
  - 주한 미군 주둔과 관련, 공화당 지지자의 79%, 민주당 지지자의 73%가 주둔을 지지
  -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 공화당 지지자의 70%, 민주당 지지자의 63%가 미군의 파병을 지지
  - 아울러 북한이 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군 부대를 공격할 경우 미군을 보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84%에 달함(팜을 염두에 둔 질문으로 생각되거나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시에도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한 공격 시 미군의 개입을 지지하는 비율이 84%라는 해석도 가능)

※ 한편, 2017년 봄 실시한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국민의 91%, 일본국민의 82%가 유사시 미국이 자국(한국이나 일본)을 돕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기대<sup>2)</sup>.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 한국국민의 기대와 미국 국민의 지지가 대체로 근접함을 시사

-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경우, 77%의 응답자가 북미 수교를 하는 것을 지지했으며(공화당 지지자의 82%, 민주당 지지자의 75%), 54%의 응답자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을 지지하였음(공화당 지지자의 52%, 민주당 지지자의 57%)
  - 북한 비핵화 시, 54%의 응답자가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를 지지(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53%로 같음). 하지만 한미군사훈련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44%만 찬성하였고 (공화당 지지자 45%, 민주당 지지자 41%), 단지 18%만이 주한미군의 ‘전면적’ 철수를 지지하였음(공화당 지지자 15%, 민주당 지지자 18%)
-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은 경우의 대응책으로 77%는 더 강력한 경제제재를 지지(공화당 지지자 86%, 민주당 지지자 75%). 북핵시설에 대한 공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가 지지(공화당 지지자 55%, 민주당 지지자 29%).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미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경우 국민의 77%가 북미 수교를, 54%가 경제적 지원을 지지**

2) 2017년 7월 13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In Asia-Pacific countries, many a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7/07/13/in-asia-pacific-countries-many-are-concerned-about-north-koreas-nuclear-program/>

25%가 지지(공화당 지지자 34%, 민주당 지지자 20%)

-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9%가 지지(공화당 지지자 20%, 민주당 지지자 37%),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 13%만이 지지 의사를 밝힘(공화당 지지자 10%, 민주당 지지자 15%)

○ 대북 군사행동 시 동맹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43%(공화당 지지자 33%, 민주당 지지자 54%), 남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는 42%(공화당 지지자 35%, 민주당 지지자 49%),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는 22%로 나타남(공화당 지지자 15%, 민주당 지지자 28%)

○ 2017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 조사에서도 단지 6%의 응답자만 북한지도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고(공화당 지지자 8%, 민주당 지지자 6%), 91%는 비호감을 가진 것으로 응답 (공화당 지지자 90%, 민주당 지지자 93%). 특히 67%는 매우 비호감이라고 응답

※ 한편, 2017년 봄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서 한국국민의 76%가 북한에 대해 비호감을, 17%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미국 국민의 78%가 북한에 대한 비호감, 12%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서 2017년 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국민과 미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북핵위협, 주한미군, 미  
군파병에 관하여 정파에  
따른 인식차이가 거의  
없어**

**분석과 함의**

○ 최근 미국 여론의 양극화 추세에 비추어 북핵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나 주한 미군의 주둔, 유사시 미군의 파병에 관하여 정당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현상임

○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며(정당 간 응답률 차이도 1자리 이내) 북한지도자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지 않고 있는 현상(정당 간 응답률 차이도 1자리 이내)도 주목할 만한 현상

- 대통령 선거기간에 트럼프 후보가 제기했던 주한미군 철수론은 실제로 국민적인 지지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2017년 위기를 경험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쪽으로 여론이 바뀐 것으로 보임

- 만약 한국 국민 사이에서 북한 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민 사이에서 북한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면 장래에 한미 간에 인식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경우 가능한 미국의 대응방안에 관해서도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지지자 간 인식격차는 모두 응답률 1자리 이내로 근소
-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간 견해차가 증가
  -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강력한 경제제재와 대북 군사행동을 지지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북핵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나 한미동맹의 중요성, 북한이 비핵화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미국 국민은 정파를 초월하여 공통된 인식과 단합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정당 간 인식의 차이가 있으나 공화당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 모두 과반수가 경제제재의 강화를 지지
-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진 견해는 적어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는 돌발적 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공화당 지지자들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 앞으로 북미협상이 잘 진행되어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남한에서 미군이 전면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국민은 경제지원에 대해 주저하거나 미군 전면철수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아 보임
- 따라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바라거나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요구한다면 미국 국민에게 그러한 양보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시키려고 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 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미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용의와 가능성이 적어 보임
- 달리 말하면 미국 국민의 여론 상으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북미 수교와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염두에 두고 비핵화 협상에 임하여야 함
  - 만약 북한이 미국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미국으

**동의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하면  
비핵화 협상은 결렬될  
수 있어**

로부터 요구한다면 비핵화 협상은 중국에는 결렬될 가능성이 존재

## 나. 외교정책

### 1) 2017년 조사<sup>3)</sup>

- 근본적인 정치적 가치들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견해 차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크게 확대됨. 이미 오바마 대통령 집권 중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였는데 더 확대됨
- 2017년 여론조사 및 후속 여론조사에 의하면, 근본적 정치적 가치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성, 인종, 종교, 교육 등의 요인보다 지지 정당(정당일체감) 때문에 압도적으로 결정됨
  -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거보다 더 강한 견해를 갖게 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과 견해차가 증가

성, 인종, 종교, 교육 등의 요인보다 정당일체감이 견해를 압도적으로 결정

### 국제주의 vs. '미국 우선주의'<sup>4)</sup>

- 2017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미국이 국제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것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응답하고, 47%는 미국이 해외의 문제에 관한 관심을 줄이고 대내적 문제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응답
  - 불과 3년 전에는 35%만이 미국이 국제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60%는 미국이 외부문제에 관해 관심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3년 사이에 국제주위에 대한 지지가 2자리 수로(12% 포인트) 증가한 것임
- 3년 사이에 여론이 변화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으로 기우는 무소속 유권자들 때문임
  - 2017년 현재 민주당 지지자 또는 민주당 동조자 중 56%가 국제주의를 지지하고 39%가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 2014년에는 정반대로 민주당

3)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7년 10월 5일 발표한 "The Partisan Divide on Political Values Grows Even Wider: Sharp shifts among Democrats on aid to needy, race, immigration." 여론조사 자체는 2017년 6~7월 실시.  
<http://assets.pewresearch.org/wp-content/uploads/sites/5/2017/10/05162647/10-05-2017-Political-landscape-release.pdf>.

4) 국제주의의 반대말로 보통 고립주의라는 표현이 쓰이나 국제화, 세계화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고립주의는 가능한 선택도 아니고 응답자의 정확한 의도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미국 우선주의'라는 표현을 선택.

지지자 또는 민주당 동조자 중 58%가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고, 38%가 국제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미국의 역할을 지지하였음

### 동맹국 관계

- 응답자의 59%가 미국은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36%는 동맹국들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 미국이 동맹국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6년 4월보다 8% 포인트 증가
- 이러한 변화도 역시 전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견해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발생 (공화당 지지자 중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1%로 동 기간 중 변화가 없었음)

### 외교 vs. 군사력

-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력보다는 좋은 외교가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 계속 다수를 차지. 지금도 응답자의 61%가 좋은 외교가 평화를 이루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30%는 군사력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 따라서 외교 대 군사력에 대한 선호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당별로 선호가 다르고 그 차이는 역대 최대 수준
- 2017년 현재 민주당 지지자/동조자 중 83%가 좋은 외교가 평화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응답. 이는 전년도 (80%) 대비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역대 최고치
- 한편 공화당 지지자/동조자 중 33%만이 좋은 외교가 평화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응답. 이는 이 질문이 처음 포함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014년만 하더라도 공화당 지지자/동조자 중 44%가 좋은 외교가 평화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응답

### 분석 및 함의

- 정당 간 외교 목표나 수단에 대한 인식 차이가 트럼프 집권 이후 더 확대되어 양극화가 심각
- 양극화가 심화한 원인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나 동조자의 견해가 변화했기 때문. 민주당 지지자/동조자들의 외교적 선호가 지난 1-2년 사이에 실제로 급격하게 변화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의

**인식이 양극화된 이유는 주로 민주당 지지자의 견해가 변화했기 때문**

표시에 불과한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만약 민주당 지지자/동조자들의 외교적 선호가 실제로 변화하였다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국제주의적이고, 동맹국을 매우 중시하며, 좋은 외교를 우선시하는 여론과 하원을 염두에 두고 외교정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 지지자/동조자의 외교적 선호의 변화가 아래의 예에서처럼 실제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
-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71%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음<sup>5)</sup>. 하지만 정당 지지자 별로 보면 공화당 지지자/동조자들의 85%가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지지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동조자들의 경우는 지지도가 63%에 그쳤음
  - 앞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동조자들의 33%만이 좋은 외교가 평화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공화당 지지자/동조자들의 북미 간 직접 대화에 대한 지지율은 85%로 앞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민주당 지지자/동조자의 북미 간 직접 대화 지지율(63%)을 상회
  - 한편 민주당 지지자/동조자들은 앞의 여론조사에서 좋은 외교가 평화를 달성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83%가 응답하였으나(2016년에는 80%), 북미 간의 직접 대화에 대한 지지율은 63%로 공화당의 지지율보다도 낮음
- 민주당 지지자/동조자들이 국제주의, 동맹국 관계, 좋은 외교 그 자체를 갑자기 강하게 선호하게 되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 국제주의, 동맹국 관계, 좋은 외교를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측면도 분명 있어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외교이면 무엇이든 반대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Anything but Trump')
  - 역으로 공화당 지지자/동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외교이면 일단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임
  - 이는 인물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뒤에서 논의하게 될 우리의 대미 정책 공공외교 전략에 주는 함의가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면  
무엇이든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어**

5) 2018년 5월 발표된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Public Supports U.S. Talks With North Korea; Many Doubt Whether Its Leaders Are 'Serious'".  
<http://assets.pewresearch.org/wp-content/uploads/sites/5/2018/05/10121616/05-10-18-foreign-policy-release.pdf>.

## 2) 2018년 조사<sup>6)</sup>

- 2018년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간 외교적 최우선 목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정당 간 차이가 더욱 확대된 것을 재확인

**2018년 조사에서도 정  
당 간 인식차이가 재확  
인되어**

### 동맹국 관계

-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동맹국과의 관계개선이 외교적 최우선 순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70%이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는 그 비율이 44%에 그침
  - 이 질문을 처음 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지지 정당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가 최대로 나타남(2011년은 민주당 지지자 48% vs. 공화당 지지자 47%)

### 비용(방위비)분담

- 한편 동맹국이 세계질서 유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외교적 최우선 순위라고 응답한 공화당 지지와 민주당 지지자 간에는 30% 포인트 차이가 있음(공화당 지지자 56% vs. 민주당 지지자 26%)
  - 2004년은 공화당 지지자는 59%, 민주당 지지자는 58%로 거의 차이가 없었음

### 러시아, 이란, 북한

-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 외교적 최우선 순위라고 응답한 민주당 지지자의 비율은 52%에 달하지만, 러시아 견제를 최우선 순위라고 응답한 공화당 지지자의 비율은 32%에 불과
  - 이란에 관해서는 정반대로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라고 보는 공화당 지지자의 비율은 52%, 민주당 지지자의 비율은 29%에 불과
- 북한에 대한 정당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공화당 지지자의 43%, 민주당 지지자의 35%가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외교적 최우선 순위라고 대답

6) 2018년 11월 발표된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Conflicting Partisan Priorities for U.S. Foreign Policy: Terrorism, protecting U.S. jobs top the public's agenda".  
<http://www.people-press.org/2018/11/29/conflicting-partisan-priorities-for-u-s-foreign-policy/>

### 분석 및 합의

- 2018년 조사결과는 2017년 조사에서 나타난 경향을 재확인해 줌
  - 공화당 지지자/동조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동조자들 간에 견해차가 역대 최고 수준
  - 견해차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민주당 지지자/동조자들의 견해가 트럼프 집권 이후 급변하였기 때문임. 과거에는 정당 간 인식격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음
- 하지만 북한에 대한 견해에서는 정당 간 인식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결과로서 유념할 필요가 있음

**북한에 대한 견해에서는 정당 간 인식격차가 크지 않아**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는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어**

### 3.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매우 비전형적인 스타일의 지도자가 집권하고 미국 국민도 전례 없이 분열된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미래를 좌우할 외교가 전개되고 있음. 우리가 소망하는 과정과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의도나 미국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한 그들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적극적인 정부 간 외교와 공공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음

#### 가. 엘리트 중심 공공외교의 한계

- 그간의 대미 공공외교는 주로 대학 캠퍼스와 워싱턴 내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미국 우수 대학에서 한국학 진흥과 미국 주요 싱크탱크에서 한국연구 증진을 지원하여 왔음
  - 워싱턴 내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워싱턴 사무소, 한미경제연구소(KEI), 그리고 지금은 활동이 중단된 한미연구소(USKI)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춘 공공외교를 수행하여 왔음
-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는 미국에 우리의 정책을 미국에 알리고 지지를 구하는 채널로써 대미 공공외교의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 잡았음.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하는 대미 공공외교는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많지도 않은 공공외교 예산이 소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되고 있음. 소수의 한국 전문가들이 각종 행사에 초청을 받으며 연구비 지원의 혜택도 누리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하여 공공외교 효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님
  -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역 연구자들이지 경제나 안보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책적 사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워싱턴 정책서를 내에서 입지가 강하지 않음<sup>7)</sup>
  -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사고가 고정된 경우가 많음. 과거에도 포용론보다는 억제보좌론을 주장하는 한반도 전문가가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주를 이루었는데<sup>8)</sup>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무엇보다도 워싱턴 엘리트와 미국 일반 국민 간의 간극이 증가하였음 (disconnect). 따라서 워싱턴 싱크탱크를 통해서 미국 일반 국민의 생각을 읽어낸다는가 워싱턴 싱크탱크를 통해서 미국의 일반 국민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음.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저학력, 저소득, 농촌 거주 중장년 백인들’의 생각이나 고민은 워싱턴 싱크탱크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관심이나 문제의식과는 천양지차임
- 주류 엘리트와 일반 국민 간에 간격이 발생하고 있을 때는 주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에 추가하여 비주류(대안) 엘리트와 풀뿌리 대중 (grassroots)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의 공공외교도 필요
- 그뿐만 아니라 공공외교 방법론적으로도 새로운 시도가 바람직.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비주류 엘리트와 풀뿌리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의 공공외교도 필요**

#### 나. 일반 국민 대상 공공외교의 필요성

- 대미 공공외교의 대상을 우정엽 박사는 ‘싱크탱크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 ‘의회 보좌관 그룹’, ‘일반 유권자 그룹’으로 삼분(三分)하였음<sup>9)</sup>. 그간의 우리의 대미 정책 공공외교는 주로 싱크탱크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과

7) 우정엽, “워싱턴 싱크탱크에 대한 공공외교 평가 및 전략,” 『세종정책브리핑』 2018-11 (2018).

8) 김인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주요 싱크탱크 성향 및 영향력 조사,” 통일부 정책연구 과제 (2011).

9) 필자는 ‘의원 보좌관 그룹’이 공공외교의 대상인지 로비의 대상인지 아니면 정부 간 외교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우정엽 박사의 견해가 다소 차이가 있음.

**일반국민도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형성한 국민의 등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

- 의회 보좌관 그룹을 대상으로 하였음
- 일반 유권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는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 공공외교보다는 지식이나 문화 공공외교를 주로 수행하였음. 즉, 미국의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국학을 진흥하거나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하여온 것임
-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제 미국의 일반 국민도 북한의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음. 이제 미국의 일반 국민을 ‘지식’ 공공외교나 ‘문화’ 공공외교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수 없으며 그들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능하다면 우리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의 발달과 포퓰리스트적 정치인의 출현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민이 과거보다 정치적으로 활성화가 되었음. 일부는 전문가의 견해보다는 인터넷을 떠도는 가짜뉴스(fake news)를 더 신뢰하며, 워싱턴 엘리트는 부패한 특권층이라고 경멸하면서 인터넷을 통하거나 직접 집회나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과 견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음
- 향후 대미 공공외교의 과제는 이처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형성하고,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미국 국민의 등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임
- 이들과 소통하고 이들로부터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적극적인 공공외교, 특히 적극적인 정책 공공외교는 ‘외국 정부에 의한 국내 여론 조작’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의욕을 앞세울 수만은 없음
- 따라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공공외교의 시작은 조심스럽게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 첫 단계는 우선 그들을 경청하는 것이 될 것. 여론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잘 분석 및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진과 메시지가 생성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파악하는데 훌륭한 데이터를 제공. 문제는 오히려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될 것
-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홍수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인들의 생각과 견해를 이해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

- 하지만 아직 기존의 공공외교 행위자들은 빅데이터 분석에 관해 관심이 깊지 않고 설사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다. 디지털 공공외교의 필요성과 한계**

- 미국의 일반 국민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50개 주의 도시와 농촌에 분산되어 있음. 따라서 워싱턴이나 대학 캠퍼스,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수행해온 전통적 공공외교 사업이나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일반 국민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음
- 이에 비해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디지털 공공외교는 전통적 공공외교 대비 상대적으로 비주류 엘리트나 풀뿌리 대중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큼
-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 공공외교의 최적 대상은 젊고 고소득, 고학력, 도시 및 교외 거주자들로서 이들은 비주류 엘리트나 풀뿌리 대중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
-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결과에 의하면, 젊고, 고학력, 중상류층 이상, 도시 또는 교외 지역에 거주, 영어 사용하는 아시아계 또는 백인일수록 인터넷과 SNS 사용률이 높음
  - 만약 특정 집단을 타깃팅하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하여 대미 디지털 공공외교를 할 경우,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주로 젊고, 고학력, 중상류층 이상, 도시 또는 교외 지역에 거주, 영어 사용하는 아시아계 또는 백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큼
- 디지털 공공외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공공외교의 활용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선거기간에 트럼프의 잦은 트위터 사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주류 엘리트나 풀뿌리 대중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사용도 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미국 전역에 산재하여 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는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
  - 2015년 현재, 성인인 미국인의 65%가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성인의 84%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잘 활용한다면 최대 84%의 미국인에게, SNS를 잘 활용한다면 최대 65%의 미국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퍼센티지가 되겠으나 전통적인 공공외교 사업이나 방식보다는 훨씬 접근 대상이 증가한 것임

**디지털 공공외교를 통하여 훨씬 많은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조합하면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과 인식 개선이 가능**

- 체계적인 디지털 공공외교를 통하여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sup>10)</sup>
  -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미국 국민은 호감을 느끼고 있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책이 평소 자신들이 가진 정책 선호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임. 이는 앞서 본 북미 간 직접 대화에 대한 지지도 조사뿐만 아니라 이란 핵 협상 및 그 파기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공통으로 발견된 현상임<sup>11)</sup>
  -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란 핵 협상이든 북미 핵 협상이든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지하고 신뢰하는 지도자가 그 협상을 지지하면 따라서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
  - 이러한 현상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같은 정도로 나타나는지 알 수 없지만, 호감이 없으면 관심이나 지지가 따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음
-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좋으나 인터넷과 SNS의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sup>12)</sup>
  - text를 기반으로 한 트위터,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동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관계에 기반한 페이스북, 개인화가 쉽고 방문자와 작성자 간 소통이 가능한 블로그, 그리고 전통적인 웹사이트 등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면 짧은 시간 내 다수의 대상을 상대로 메시지 전달과 이미지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음

10)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에서 2018년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67%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공화당 72%, 민주당 65%).

11)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5년 3월 18일 발표한 "Americans (especially Republicans) distrustful of Iran as nuclear deal looms." 2018년 5월 8일 발표한 "Public Is Skeptical of the Iran Agreement - and Trump's Handling of the Issue: Only about a quarter have heard 'a lot' about the nuclear agreement".

12) 한인택 "대미 디지털 공공외교의 전략과 과제," 『대미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방화 연구』 (한국국제교류재단 2016).

#### ❖ 저자 약력

##### ■ 한인택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연구실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同 대학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UC, Berkeley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UC, Davis, University of Washington,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에서 강의. 핵전략, 안보협력, 공공외교가 주요 관심분야이며,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의 모색: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과학적 공공 외교”와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등의 저술이 있음.

목 차

- 1.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곡점
  - 1) 한중 수교 : 기존 인식의 전환과 우호 인식의 형성
  - 2) 중국의 부상 : 우호적 인식의 전환과 부정적 인식의 형성
  - 3) 강대국화 : 상대적 약소국 중국의 인식 모순
- 2.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그 함의
- 3.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한 대응 방안

#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안

김상규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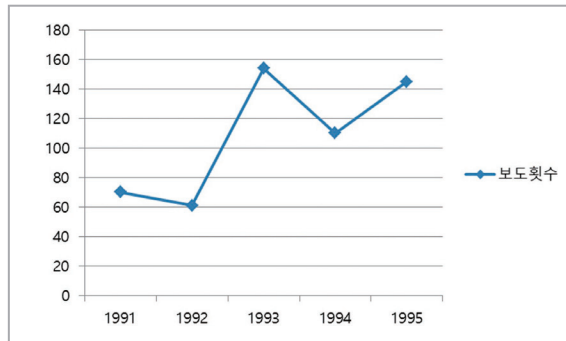
## 1.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곡점

### 1) 한중 수교 : 기존 인식의 전환과 우호 인식의 형성

○ 문화체육 요인에 의한 인식 변화

- 수교 초반인 1991년 북경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한(42%)과 북한(40%)에 대한 호감도가 비슷함. 그러나 15~24세, 24~34세에서의 비율은 북한보다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게 나와 전후(戰後) 세대가 전쟁 세대보다는 좀 더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높음
-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역량이 국가의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고 추론할 수 있음. 86아시아게임이나 88서울올림픽 같은 국제적 스포츠 행사나 한중 간 경제 교류 활동을 매개로 한국에 대한 정보 유입과 관련 인식 형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최대 발행 부수 인민일보(人民日報)는 88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게재하는 한편 한국 상품에 대한 상업 광고를 신기 시작. 인민일보의 보도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한국 관련 보도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 인민일보의 한국 관련 보도 횟수<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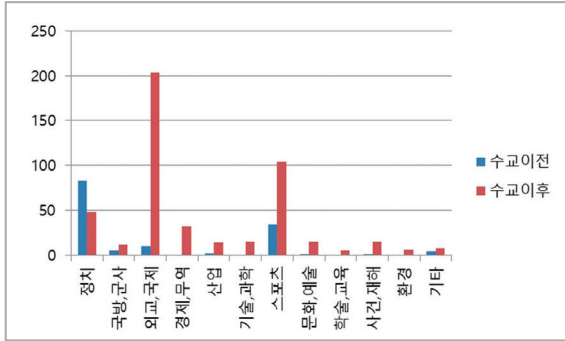


1) '한국'을 주제로 긍정적인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인민일보 DB에서 보도된 뉴스를 키워드 분석한 결과임.

<http://rmrb.lib.tsinghua.edu.cn:918/WEB/index2.html>

- 인민일보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교 이전과 달리 한국과 관련해 전 분야에 걸쳐 보도되었고, 특히 외교, 국제, 스포츠, 경제무역 등 국가간의 상호 교류에 관한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그림 2] 한중 수교 전후의 인민일보 보도주제 비교분석<sup>2)</sup>



- 그러나 북한을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68.2%로 초기 한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의 냉전 시기의 정치적 이념과 적대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 한국보다 먼저 수교를 맺은 일본은 한국보다 인지도가 높고 우호적 인식의 비율이 높음
- 1995년 중국 여론 조사 기구인 영점조사(零点調査)의 결과를 보면, 일본 남성 및 여성의 호감도 순위는 각각 3위(7.5%), 2위(28.7%)지만, 한국 남성과 여성의 호감도 순위는 각각 10위(0.8%), 5위(2.4%)를 차지. 수교 초기 중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보다 낮게 나타남<sup>3)</sup>
- 1997년 대흥기획 마케팅 전략 연구소가 시행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57.3%의 중국인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정도가 보통이다’, 27.7%는 ‘한국을 조금 좋아한다.’, 2.9%는 ‘한국을 아주 좋아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어 여전히 수교 초기에는 인식 형성이 완전하게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sup>4)</sup>
- 그러나 한국에 대한 정보 유입이 늘어나면서 우호적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증명함. 특히 중국 TV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얻게 되고<sup>5)</sup>, 그와 동시에 한국의 K-POP 등 한국 가수들의 진출이

수교 초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북한과 비슷하고 일본보다 낮게 나타나

2) 황해연, 「인민일보의 북한과 남한 관련 보도 비교연구: 1972-2012년」, (이화여자대학교, 2014), 81-82쪽.

3) 零点調査, “國家印象”, <http://www.3see.com/free-report/reports/2003/08/05/3326.html> (검색일 2018.12.5.)

4) 왕샤오링(王曉玲), 「중국인들 마음속의 한국 이미지」(북경: 민족출판사, 2009), 45쪽.

5)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어 4%의 시청률을 기록. 방송사와 채널 등 수천 개가 넘는 상황에서 시청률 1%를 넘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시청률 4%라는 결과는 해당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고 영향력이 대단했는지 알 수 있음.

**수교 이후 약 10여 년  
간 문화와 스포츠가 가  
장 강력한 인식 형성기  
제로 작용**

- 활발해지면서 중국 청년층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해 열광하게 됨. 드라마, 음악 등 문화적 요인이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도를 상승시킴
- 문화에 기초한 정서적 교감이 정치적 이유로 단절되었던 양국 사이의 물리적 시간 공백을 극복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함. 문화적 유사성은 호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문화적으로 유사한 국가는 서로 선호하고 신뢰하게 해 줌<sup>6)</sup>. 1999년 베이징 청년보(北京青年報)는 이러한 문화적 조류에 대해 ‘한류(韓流)’라 칭하였고, 이후 한국 음식과 의류 등 점점 여러 분야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하기 시작
  - 2000년 시행한 한일 공동 여론 조사에서도 ‘한국이 좋다’고 대답한 비율이 중국 35%, 미국 23%, 일본 20% 순으로 한국을 선택한 중국인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옴. 중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8.22%가 ‘매우 가고 싶다’, 61.78%가 ‘가보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우호적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짐<sup>7)</sup>
  - 2003년 성균관대학교 국가 브랜드 경영 연구소가 11개 국가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인 응답자의 48.3%가 ‘한국’ 하면 생각나는 것으로 문화를 선택. 문화 요소 중에서는 드라마가 21.4%, 패션이 18.3%, 음식이 17.8%를 차지
  - 한·중·일 3국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매우 호감’이 7.7%, ‘대체로 호감’이 53.4%로 조사됨. 해당 연구는 외국 TV 드라마 시청 빈도와 해당 국가에 대한 호감 정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sup>8)</sup>
  - 이 같은 일련의 결과는 수교 초기부터 약 10여 년간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형성에 문화, 스포츠 요인이 가장 강력한 인식 형성 기제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줌

○ 경제적 관계와 상호 인식에 관한 영향력

-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적 요인이 문화적 요인보다 그리 큰 영향

6) 다음의 연구를 참고. D. Byrne, The Attraction Paradigm (New York: Academic Press, 1971), Inglehart, Ronald. “Trust between nations: primordial ties, societal lear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ulture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Touchstone, 1996)

7) 연합뉴스, “중국인 한국에 가고 싶다”, 2001년 6월 12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080069> (검색일: 2018.12.5)

8) 디지털 타임스, “드라마가 한국 호감도 높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4112602010716700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4112602010716700001) (검색일: 2018.12.5)

을 끼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임. 2003년 말,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2004년 말에는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국가 관계를 이루고 있었음

- 그러나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음. 한국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만, 실질적 무역량의 증가와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상위를 차지한 국가보다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었음[표 1]

[표 1] 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단위: %)<sup>9)</sup>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미국	84.4	미국	81.8	미국	77.5	미국	71.5	미국	69.2
일본	46.4	일본	48.6	일본	44.7	일본	38.1	일본	29.2
러시아	15.8	러시아	12.4	러시아	17	러시아	16.4	러시아	21.6
독일	8.5	한국	6	한국	11.8	한국	10.5	한국	13.4
싱가포르	7.6	독일	5.1	독일	5.5	독일	9	독일	11
영국	6.8	영국	5.6	영국	5.8	영국	6	프랑스	10.4
한국	6.7	싱가포르	4.1	싱가포르	4.7	싱가포르	5.3	영국	7.7
프랑스	4.2	프랑스	2.6	프랑스	4	프랑스	6.5	호주	5.1
호주	4	호주	2.5	호주	3.9	호주	4.7	싱가포르	5
북한	1.6	북한	1.8	북한	4.4	북한	3.6	북한	3.3

- 당시 중국인들은 경제적인 사안은 아주 중요하며, 경제무역 영역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음. “향후 5년 중국에 가장 필수적으로 제정할 외교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7.6%가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무역 교류를 더욱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응답. 이는 대만과의 통일 문제(30.6%)보다 7%가 높은 결과였음<sup>10)</sup>
- 이 같은 결과는 갈등 발생 시, 우리가 중국에 경제적 협력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바꾸어 말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 상대국이지만, 한국은 중국에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 그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 실제로 과거 마늘 파동(2000년)과 김치 파동(2005)을 비롯해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에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한 것은 중국인들이 가진 이 같

**경제적 협력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

9) 零点調査, “中國市民眼目中的世界(2001-2005)”, <http://www.3see.com/free-report/reports/2006/03/22/6269.html>(검색일: 2018.12.11.).

10) 零点調査, “中國市民眼目中的世界(2001-2005)”, <http://www.3see.com/free-report/reports/2006/03/22/6269.html>(검색일: 2018.12.11.).

은 인식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한중 수교가 맺어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 실현에 대해 기대감이 컸기 때문임. 그러나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우호적 인식 형성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 2) 중국의 부상 : 우호적 인식의 전환과 부정적 인식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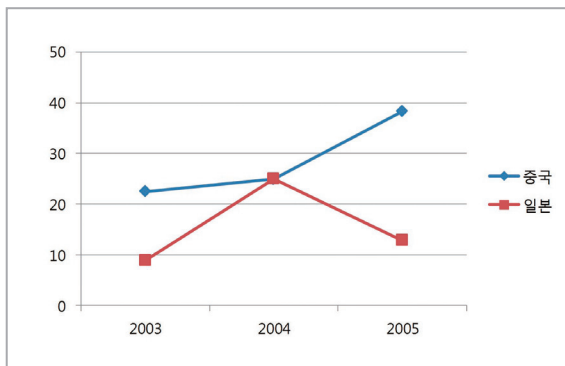
**한국이 중국문화유산을  
강탈한다는 보도로 한  
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  
적으로 전환**

- 역사 정체성 문제의 갈등과 협력의 이중주
  -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중국의 대한국 인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음. 한국은 동북공정을 역사 정체성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중국은 지방 정부에서 수행하는 연구로 치부하여 양국 간 인식의 격차가 존재
  - 강릉 단오제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문제 역시 중국인의 대한국 인식은 악화 기제로 작용함. 한의학, 중의학 논쟁을 비롯해 한국이 중국의 문화유산을 강탈한다는 식의 보도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에서 유언비어가 대량 생산.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짐
  - 그런데도 2007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시행한 한·중·일 3국 인식 조사에서 중국인들은 6.6%만이 '양국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답함. 한국일보, 일본 요미우리신문, 중국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 '랴오왕둥팡'(瞭望東方)이 공동으로 시행한 한·중·일 공동여론조사에서도 중국인 응답자의 74.1%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다', 73.1%가 '한국을 신뢰한다.'라고 답을 하는 등 상당히 이중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 이중적 인식의 원인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때문임. 2005년도 들어서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일시적으로 우호적으로 변함. 한국 역시 고구려 역사 문제로 중국에 대해 호감도가 줄곧 하락하던 것과는 달리 여론조사 결과에서 일시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와 위안부 등 영토 문제와 과거 역사 문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센카쿠 열도 문제가 지속하여 국가 간 갈등 국면을 조장하고 있었음. 일본의 역사 교과서나 영토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한중간에 갈등이 생겨 부정적인 인식의 흐름이 생기더라도 두 나라의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는 모두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변환되어 양국 서로 우호적 인식 상태로 전환
  - 일본이 조장하는 역사 갈등과 영토 문제의 상수가 독립변수로 작용하여 한중 양국의 우호적 인식 형성의 종속변수로 작용함.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후소샤(扶桑社)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

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면서 한중 양국의 반일 감정은 상승

- 이 시기 한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반도 주변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국가'는 '중국' 38.3%, '미국' 37.2%, '일본' 12.9%. 2004년 8월, 중국의 고구려 역사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던 시기, 동일 기관에서 시행한 여론 조사 결과 역시 중국이 24.9%, 일본은 25%. 중국은 전년 대비 13.4%가 상승한 수치이고 일본은 12.1%가 하락한 수치([그림 3] 참조)
- 같은 설문 조사에서 중국인의 75%, 일본인의 61%가 '중일 관계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고, 중국인의 64%와 일본인의 28%가 상대국을 '싫다'라고 답했는데, 이 수치는 동일 기관에서 시행한 결과 중 역대 최고치임. 또 한국인의 94%와 일본인의 61%가 '한일관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고, 양국 국민 모두 상대국에 대해 '싫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인 63%, 일본인 22%이었는데, 이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었음<sup>11)</sup>

[그림 3] 일본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sup>12)</sup>



○ 중국의 부상과 중화외식의 고양

- 2008년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증가하고 우호적 인식은 하락하는 추세로 들어서는데, 이 시기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는 시기와 맞물리고 있음. 2008년 9월,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고,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세계 경제를 이끌며 경제 대국으로 그 지위를 확고히 다져나감
-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중국인의 국민적 자긍심이 상

**2008년 이후 부정적인 인식은 증가하고 우호적인 인식은 지속적으로 하락**

11) 동아일보, '韓 63%-日 22% "상대국 싫다"...20년來 최악', 2005년 4월 2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96054> (검색일: 2018.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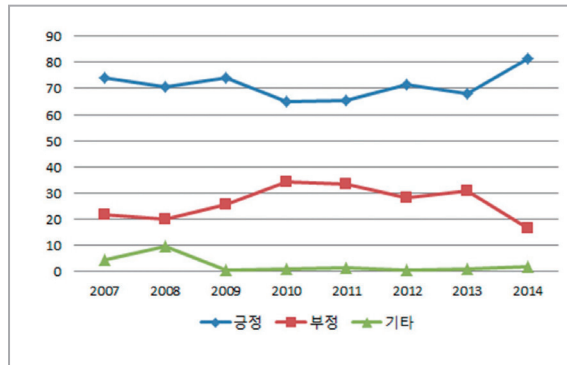
12)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동향과 분석 43호」, (서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05), 36쪽.

**베이징 올림픽과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양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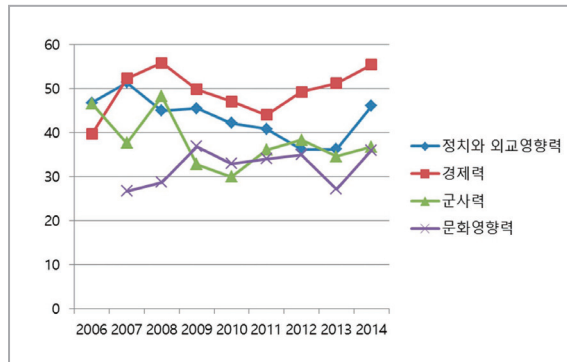
승한 상황에서 경제적 요인까지 더해져 민족적 자부심은 더욱 고양되었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기 나라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중국이 93.6%로 가장 높은 비율. 일본은 89.4%, 한국이 86.2%를 차지하고 있음<sup>13)</sup>

- 중국의 국력과 경제력에 관한 중국인들의 인식, 즉,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음(그림 4) 참조. 중국의 강대국화 요인은 경제력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결국, 경제적 성장이 중국인들의 자신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극명하게 보여줌(그림 5)

[그림 4] 중국은 이미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가?<sup>14)</sup>



[그림 5] 중국이 이미 세계적 강국으로서 갖춘 조건은 무엇인가?<sup>15)</sup>



13) “멀어져가는 한·중·일. 부정적 인식 악화”, 「연합뉴스」, 2008년 11월 2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385121>(검색일 2018년 12월 15일).

14) 環球輿情調查中心, 中國民意調查, 第四輯, (北京: 人民日報出版社, 2015), p18.

15) Ibid.,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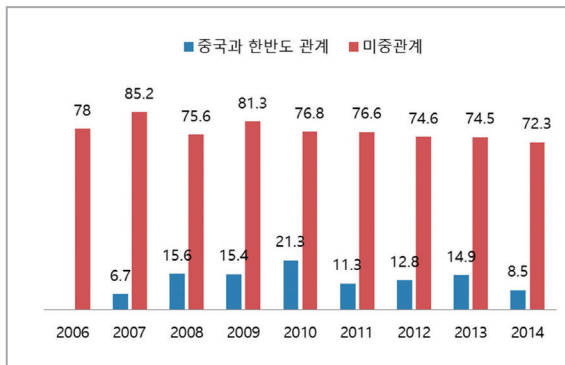
### 3) 강대국화 : 상대적 약소국 중국의 인식 모순

#### ○ 외부 요인에 의한 중국의 인식 변화

-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반감의 원인에는 양자 관계로 인한 갈등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갈등 요인이 존재함. 가장 핵심적인 외부 요인은 미국 요인으로 한중 관계에서 중국인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 북핵 문제는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상수이자, 한중 관계의 독립변수임
- 중국의 입장에서 두 요인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인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둘이면서 하나인 문제라고 봐도 무방함. 한미관계가 강화하는 것이 중국에 전략적 부담감으로 작용
- 중국인 역시 이 문제에 관한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음.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관계가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20.3%에 불과하지만 54.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이 같은 결과는 중국인이 한미 양국의 관계 강화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sup>16)</sup>
- 실제로 중국은 한중 관계를 위시한 한반도 문제보다 미·중 관계에 대해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는 중국인의 대외관계 인식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남. “어떤 관계가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평균 70%가 넘는 비율로 ‘미·중 관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답하고 있는 반면, 한중 관계는 남북한을 모두 아우르는 한반도 문제 안에서 인식하고 있음(그림 6 참조)

**미국요인은 한중관계에서 중국인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

[그림 6]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관계는 무엇인가?<sup>17)</sup>



- 한중 관계는 한중 양국의 양자 관계보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의 전

16) 전성홍,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중관계의 실질적 개선 방안」,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2011), 21쪽.

17) 環球輿情調查中心, 中國民意調查, 第四輯, (北京: 人民日報出版社, 2015), p5.

략적 가치 판단과 아울러 한반도 문제로 설정되어 있음. 즉, 한미관계라는 대외적 독립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속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한중 관계의 강화가 한미관계의 약화를 가져왔고, 이명박 정부 시절 한중 관계가 약화한 것 역시 한미관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이는 집권당의 성격과 그에 따른 정책 변화에 따라서 한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박근혜 정부는 집권당의 성격이 이전 정부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초반 양국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음. 하지만 대외적 요인의 변화 때문에 한중 관계가 가까워졌다기보다 두 정상의 개인적 친분, 한국 지도자의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2014년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에서 중국어 연설을 한 것을 비롯해 2015년 인민일보에 신년인사 동영상을 게재한 것은 중국 대중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로,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효과적인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음<sup>18)</sup>

○불신(不信)과 불안 인식의 표출

- 그러나 단기적이고 가변적인 방법은 본질적인 한중 관계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함. 중국이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우호적인 인식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 특히 안보 위협이 되는 미국 요인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임.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 지역에 집중해 왔음. 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기(Pivot to Asia)’ 전략에 이은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을 시행
-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을 하던 미국이 역내 경쟁자로 진입하여 중국을 압박했기 때문에 역내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음. 즉, 중국을 겨냥한 미국 대외정책의 수정, 이로 인한 동북아 역내 동맹국의 긴밀한 관계 조성은 중국의 대외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음
-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맞물려 한미, 미일 양국 간의 군사적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음. 사실 중국은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과거부터 줄곧 위협 인식을 표하며 부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변화**

18) '대장금'이 중국에서 인기를 끈 것이 한국 호감도를 높였듯,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의 인기 또한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음.

정적 견해를 보여 왔음

-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및 천안함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한미 간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실시. 당시 중국 정부는 “외국 군용합기가 서해 및 중국 인근 연해에서 중국의 안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해당 당사국은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지역에 긴장 국면을 만들지 말라”는 강경한 견해를 밝힘<sup>19)</sup>. 더 나아가 한미 군사 훈련이 시행되는 시기에 중국 역시 집중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상당히 의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함(<표 2 참조>)

<표 2> 한미 양국과 중국의 군사 훈련 실시 내용(2010년 사례)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	중국의 군사 대응 훈련
한미 연합 군사훈련(7.16)	산동에서 신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연습 실시(7.25)
한미 해상연합훈련(7.25)	
한미 연합 잠수함 훈련(7.28)	인민해방군 서해 부근 대규모 실전 군사 훈련 및 실탄 훈련 실시(7.28)
	인민해방군방공부대 산동성과 하남성에서 연합훈련 실시 (8.2)
	방공부대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8.3)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 훈련실시(8.16)	제남 작전구역 인민해방군 첫 연합훈련 실시 (8.12)
한미 연합 훈련(11.28)	심양 군사구역 훈련(11.29)
	북경 군사구역과 제남 군사구역 훈련 (11.30)

자료 출처: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필자가 작성함

- 반면, 2017년 미국, 일본, 인도 3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한 말라바 합동군사훈련(Malabar Naval Exercise)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주목할 만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음. 그러나 지금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 실시하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
- 중국이 북핵 문제에 관해 줄기차게 주장하는 쌍잠정(雙暫停)과 쌍궤병행(雙軌並行)의 전략 뒤에는 미국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상대적 약소국의 모습이 내재하여 있음.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한반도 내에서 실시되는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 86.7%,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81.7%의 응답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며<sup>20)</sup>, 또한, 55.6%의 응답자는 미국

**쌍잠정과 쌍궤병행의 전략뒤에는미국을 두려워하는 상대적 약소국의 모습이 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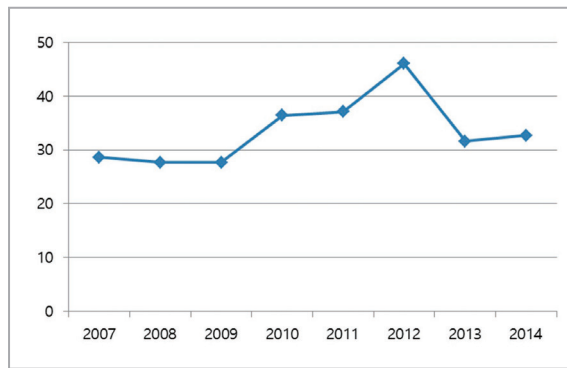
19) 中華人民共和國駐牙買加大使館, <http://ae.china-embassy.org/chn/wjbfyrth/t714888.htm> (검색일: 2018.12.9.)

20) 「中國日報」, ‘2010中國人眼中的美國系列調查’, [http://www.chinadaily.com.cn/hqjs/2011-01/17/content\\_11866720.htm](http://www.chinadaily.com.cn/hqjs/2011-01/17/content_11866720.htm) (검색일: 2018.12.10.).

**사드 배치를 북핵문제  
해결과 무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결과물로 인식**

- 이 한반도 위기를 지속해서 조성하는 주요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음<sup>21)</sup>
- 중국은 북핵 문제가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부산물로 보고 있음. 중국 외교부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 전략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동북아 지역 국가의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사드 배치를 그만두고 관련 시설을 철수하라”라고 강력한 입장을 고수함<sup>22)</sup>
- 이는 결국 사드 배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결과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중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 ‘북핵을 방어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후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그림 7) 참조)

[그림 7] 미국이 전략적 중국 억제를 하고 있다는 인식 비율 변화<sup>23)</sup>



- 사드 배치는 북핵 방어를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닌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무기 체계이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강대국인 미국에 대응하기보다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에 자신의 힘을 투사함. 결국, 이 같은 행위 자체가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모순의 방증이며, 저변에 깔린 불신과 불안감의 다른 아님

21) 環球輿情調查中心, 中國民意調查, (北京:人民日報出版社, 2012), pp90-91.

22)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490562.shtml](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490562.shtml) (검색일: 2018.12.14.).

23) 環球輿情中心, 中國民意調查, 第四輯, (北京:人民日報出版社, 2015), p9.

## 2.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그 함의

- 한중 수교는 양국이 추구하는 고도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여 이루어진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음. 교류가 증대되면서 상대국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이 형성될 기회가 만들어진 점 역시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성립하는데 영향을 주었음
-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적 관계는 물론 한국 전쟁 등 현대사의 반목과 적대적 인식의 전환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노정함. 체제와 이념의 차이는 물론 동북공정 문제를 비롯해 사드 문제 등, 한중 양국 사이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정체성과 연관된 의식적 문제이고 우리가 종속변수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임
- 사드 문제 이후 중국이 보여준 일련의 조치들은 수교 초기 주로 문화적 요인에 기초한 우호적 인식 형성, 밀접한 경제적 관계임에도 양국 관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음. 중국이 우선시하는 핵심이익 앞에서 단순한 현실적 이익만을 앞세운 관계 설정은 그 한계가 명백함
- 따라서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이 중국에 가졌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한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접근을 미·중의 파워게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력자, 경제적 이익 실현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여 분석하고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음
- 즉, 중국인의 근본적인 인식을 살피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무엇을 중요시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함. 한중 관계는 지금까지 이해(利害)관계를 맺고 있었음. 그러나 이제는 이해(理解)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함.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중국이 왜 그렇게 하는지,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분석이 필요함
- 특히 중국인은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확대되는 것을 상당한 위기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됨. 불신과 불안감 등 중국인이 갖고 있는 위기 인식을 상쇄시키고 희석할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논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한중관계는 지금까지의  
利害 관계에서 앞으로  
는 理解관계로 형성해  
가야**

## 3.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한 대응 방안

### ○ 일반 대중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 중국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피해 의식, 주관적 저평가에 관한 자각이 필요함. 한국은 과거 중국의 영향을 받던 조공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와 경제력을 가진 강한 중견 국가임. 관련 문제에 관한 유연한 사고와 국

**중국의 발전과 중화의  
식의 고양은 한국의 문  
화적 자부심과 충돌하  
는 '양날의 칼'**

- 제 시민으로서의 통합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민족주의에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교육 실현을 통한 포용 국가로서의 면모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중국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이해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맞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중국의 실제적인 국가역량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체제를 이해시키고 중국인들의 현 상황을 파악해야 함. 서구의 시각에 기초하여 중국의 국력을 과대포장하거나, 의도를 오판하여 중국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함
  - 대부분의 중국인 인식과 관련한 연구의 결론이나 전망, 갈등을 해결할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 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드라마, K-pop 등의 분야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물론 이 같은 방법이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형성과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견 타당함
  -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중국 사회의 발전, 중국인의 의식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방법론을 답습하고 있음. 중국 사회의 발전, 중국인의 중화의식 고양(高揚)이 한국인의 문화적 자부심과 충돌하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함
  -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달은 온, 오프라인을 넘어서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형성되고 있음.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향성의 문화 유입이나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음. 중국의 이해를 도모하고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쌍방향성 교류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함. 역사문화 방면의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지 진출을 통한 한국의 문화가 시나브로 연착륙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이 시급함
-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식 교류의 플랫폼을 구성해야 함. 대부분의 학술 연구나 정부 차원에서의 연구 활동은 명망 있는 학자들을 초대하거나 중국의 싱크탱크를 초대하여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을 운용함. 그러나 이는 효율성보다 상징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음. 향후 정책 결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신진학자들을 발굴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 교류 접촉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신진학자들의 토론회나 대학이 진행하는 학술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좀 더 낮은 곳에서부터 토대를 다져야 함
  -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과거 외교부에서 시행한 파워 블로거(왕홍)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이 우호적인 인식을 갖

- 도록 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단기간의 전시성 활동만으로는 중국인들의 우호적 인식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중국인들에게 교육과 시설 등을 지원한 한국기업의 캠페인 형식의 방법론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 사드 갈등 이후, 한국 내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하였음. 이 같은 생각의 기저에는 여전히 경제적 관점,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바라본다는 사실이 내재하여 있음. 중국을 이익 실현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상생과 공존의 대상으로 본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거나 스스로 정책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올 것임. 미·중은 우리에게 선악, 시비의 대상이 아님. 사드 문제 같은 특수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설령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온다면 한국의 국가이익 실현에 기초해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한, 혹은 모호한 태도를 보일 사안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함
  - 한중 양국 사이에는 과거의 역사나 문화적인 정체성 문제나 국가안보와의 갈등은 물론 환경이나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도 상호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환경과 사이버 영역의 문제는 양국 사이의 감정적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환경 문제는 중국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중국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련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의 차원에서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전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함
  -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중국과 관련한 자극적이고 편협한 시각의 언론 보도 행태임. 이 같은 언론 보도는 부정적인 인식 확산의 가장 선봉에서 있고 그 피해가 심각함. 상호 소통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임. 중국의 보도 행태와는 별개로 우리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보도 행태를 지향해야 중국의 행태에도 강력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음

**환경이나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영역에  
서도 상호 부정적 인식  
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상기 보고서의 내용은 중소기업 41권 4호에 게재된 논문을 JPI정책 포럼 형식에 맞게 정책 대응 방안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재수록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 저자 약력

■ 김상규

現 한양대학교 중국 문제 연구소 연구교수(한양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 국제학(중국학)석사, 중국 칭화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파리 정치대학 교환연구원 역임.

주요 연구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 변인 재고찰-시진핑 시대를 중심으로(2018), 한·중·일 3국의 위기와 협력에 관한 연구-비전통 안보 영역의 이슈를 중심으로(2018),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한중 인식 차이와 협력 분석: 평화적 갈등 해결을 중심으로(2018), 중국인의 대한민국 인식 변화와 사드(2017),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 학계의 논쟁 분석(2017), 韓中供应链安全合作探析-以非传统安全的视角为主(2015), 중국 국제관계학계의 역사와 내부 논의에 관한 분석(2015), 日本政治右傾化对中国公众对日情感的影响:以信息沟通分析为中心(2013) 등 다수.

#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 징용공 문제 관련 중앙 일간지 보도로 본 對韓 공론

고바야시 소메이 (니혼대학 부교수)

## 1. 서론

### 가. 여론조사를 통하여 본 일본 사회의 對韓 인식

- 2018년 6월 발표된 언론 NPO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46.3%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으나 對韓인식 자체는 개선되는 추세였다고 할 수 있었음
- 2018년 하반기 이후 욱일기 게양 문제, 한국 해경에 의한 잠정 수역 내에서의 일본어선 조업 정지 명령,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판결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일본 사회에서 한국을 둘러싼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특히 대법원판결 이후 일본 사회의 한국에 대한 분위기는 급속히 그리고 더 심하게 악화되고 있음
  - 아사히신문 여론조사(2018년 11월 17-18일 실시)에서는 한국 대법원판결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 “나빠졌다”가 53%, “변함없다”가 41%인 것으로 나타났음
  - NHK 여론조사(2018년 11월 9-11일 실시)에 따르면 배상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 69%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답하였고,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이었음
  - 산케이신문·FNN(Fuji News Network) 공동 여론조사(2018년 11월 20일 실시)에서는 한국을 외교나 경제활동의 상대국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1.6%에 달했음

### 나. 여론조사의 한계

#### 1) 공론, 정서, 여론

- 여론조사는 대중적인 심정의 확산과 경향, 그 시간 계열적인 변화를 계량적으로 포착하고 있음. 그러나 여론조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의견 등

## 목 차

1. 서론
  - 가. 여론조사를 통하여 본 일본 사회의 對韓 인식
  - 나. 여론조사의 한계
2. 징용공 판결에 관한 중앙 일간지 보도
  - 가. 판결 직후의 사실
  - 나. 판결 후의 각 중앙지의 보도
3. 악화된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제안
  - 가. 일본 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 고착화와 일본인과의 소통 필요성
  - 나. 일본 사회에서 對韓 감정의 다양성
  - 다.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 일본 사회 안에서 인식의 차이

**징용공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분위기는 급속히,  
그리고 더 심하게 악화**

사회 내부의 담론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분포하는지는 충분히 밝혀주지 못하고 있음

- 여론을 공론(public opinion)과 정서(sentiments)로 구성된 복합체로서 보는 경우, 기존 여론조사에서 파악되는 것은 정서라고 할 수 있음. 여론조사라는 방법에 내포된 한계를 감안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읽을 필요가 있음. 본고에서 사용하는 분위기는 공론과 정서로 구성된 복합체로 여론을 파악함

## 2) 분석 과제

- 공론은 신문이나 잡지, TV와 같은 전통적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나타나고, 정서는 전통적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공간인 인터넷에서도 나타남. 어떤 사회의 분위기를 분석할 때 여론조사 결과만 이용하면 분위기 중 일부분만 파악할 수 있음. 여론을 공론과 정서로 구별하고, 어떤 미디어에서 공론이나 정서가 표출 또는 내포되는지에 유의해서, 각 미디어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필요
- 본고에서는 중앙 일간지가 어떻게 대법원 징용공 판결을 보도했는지에 주목하고 거기서 전개된 공론을 파악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 내 분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함

## 2. 징용공 판결에 관한 중앙 일간지 보도

### 가. 판결 직후의 사실

#### 1) 요미우리신문 (판매 부수: 835만882부)

-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10월 31일자 사실 '한일협정에 반하는 배상명령'에서, 대법원판결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장을 하면서 비판. 첫째, 한일 국교 정상화에 즈음하여 맺은 합의에 명백히 반해,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온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한 판결인 것; 둘째,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원 징용공도 포함된다는 것은 협상 기록에서 명백하며, 한국 역대 정권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결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 셋째, "(대법원 심리가) 반일 내셔널리즘에 영합해 불합리한 인정을 답습한" 판결이라는 것이었음
- 같은 사실에서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에 의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중앙 일간지들은 일제  
히 징용공 판결을 사설  
에서 다루어**

2) 아사히신문 (판매 부수: 570만3,165부)

- 10월 31일자 사설 ‘축적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대응’은 정부 간 관계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쌓아온 이웃 관계를 망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
- 노무현 정부 시절 국내법을 정비해 원 징용공들에게 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정에 따라 국제협정을 둘러싼 견해를 변전시키면, 국가의 정합성(整合性)이 문제시되고 신뢰성도 손상될지도 모른다”라고 경종을 울렸음
- 한편, 동사설은 일본 정부에게는 협정을 둘러싼 견해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많은 사람에게 폭력적인 동원이나 가혹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엉거주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 역사를 마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負)의 역사 (negative history)에서 유래하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물으며, 정치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음

3) 마이니치신문 (판매 부수 : 257만5,930부)

- 10월 31일자로 사설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조약의 일방적인 해석 변경’은 판결이 한일 기본조약을 뒤집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음
- 노무현 정권에 의한 청구권 협정 해석과도 어긋남이 생기고 있음도 거론하여,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조약이나 협정 해석을 변경한다면, 국제법의 규범을 뒤틀어 한일 관계에 큰 대립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종을 울렸음
- “일본도 감정적 대립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제가 필요하다”라면서도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은 한국 정부라는 것을 자각했으면 한다”라며, 한국 측에 대응을 요구하는 주장을 게재했음

4) 일본경제신문 닛케이신문(판매 부수 : 235만2,951부)

- 10월 31일자 사설은 판결이 한일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태이며 한일 비즈니스에 대한 타격 그리고 한층 더한 한일 관계의 냉각화를 지적했음
- 한일 간 역사 문제의 무게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일 역대 정권이 쌓아온 국가 간 협정이나 약속을 경시하고, 어기려 하는 듯한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음
- 판결 배경으로서 사법의 판단이 정권이나 여론에 좌우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음
- 한일 양쪽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어, 원 징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음

- 일본 측은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한국 정부에는 “국내 문제로 대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5) 산케이신문 (판매 부수 : 145만7,302부)

- 10월 31일자 사설 ‘항의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가 간의 약속을 무시하는 판결”이며 “한국 사법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협정 준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일본 정부에게는 ICJ 제소 등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대항수단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라며 “(한국으로부터의) 근거 없는 요구에 굴복하면 요구를 더욱 초래할 것”이 되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일본 정부는 사과 외교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음

나. 판결 후의 각 중앙지의 보도

**요미우리는 한국이 적  
극적으로 사태를 수습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

1) 요미우리신문

- 10월 31일자 서울발 특파원 기사는 대법원의 사법 판단조차 국민감정에 좌우되기 쉽다고 지적한 뒤, “한일 간에 오랫동안 공유해온 종래의 견해와 입장에 입각하지 않고, 한국 독자의 일방적인 역사관이 짙게 반영되는 것이 되었다”고 설명했음
- 11월 1일자 칼럼 ‘편집수첩’에서도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에서 동원된 분들은 매우 안쓰럽지만, 반일 내셔널리즘에 휩쓸린 판단일 것”이라며 “국제법을 감안할 이성도 없고 용기도 없다”라고 단언했음
- 11월 2일자 기사 ‘문 대통령 어른거리는 반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사태 수습을 서두르지 않는 모습 뒤에는 “반일 민족주의 사상이 어른거린다”라고 하여 문 대통령이 “사법 판단이나 국내 여론을 가려내면서 자신의 반일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라고 지적했음
- 11월 30일자 사설 ‘문재인 정권은 수습책을 조속히 보여주라’는 “징용공 재판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둔하다”라고 하며 “아직까지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지적. 이어 “문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한국 정부에 의한 원 징용공 보상 확충이나 일본 기업이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음.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징용공 재판의 피고 기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일체

가 되어 대처할 필요성과 국제사회를 향한 정부에 의한 정보 발신의 중요성을 지적했음

- 전문가들의 칼럼으로서 12월 15일자 논고 ‘논점 한국은 스스로 체결한 협정 지켜라’ (국제법 전문가인 사카모토 시게키 도시샤대 교수)에서는 첫째, 대법원판결이 65년 체제를 뒤집는 것이고, 한국이 「빈 조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둘째, 징용공 보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바 있다는 것. 셋째,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의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받은 3억 달러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의 성격을 지닌 자금”이라는 결론에 반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또한, “한국 정부에는 스스로가 체결한 협정을 준수하는 조속한 대응을 바라고 싶다”라며, 한국 정부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
-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는 한국 측이 사태 수습에 나설 필요성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음

## 2) 아사히신문

- 11월 1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마치다 미쓰구 前 주한일본공사는 “한국의 대법원판결이 53년 전 합의를 뒤집은 것”에 대해 “일본의 노력 부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과거의 결정도 뒤집어도 상관없다는 한국의 국가의 사정이 크다”라고 지적해서 한국 사법에 대한 여론의 영향이라는 면을 시사했음
- 11월 8일자 칼럼 ‘나의 관점’(다마(多磨)대학·를 형성 전략연구소의 브래드 그로서먼(Braed Glosserman) 부소장)은 대법원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리라고 하면서도 일본은 경제 관계에 주목한 전략적 시각에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향해야 하고 그것은 일본의 약한 지역 외교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지도적인 역할과 발언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음
- 11월 14일자 대담 기사 ‘한일 간 화해의 맹세’(사사에 겐이치로 前외무성 사무차관·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박준우 前 한국 대통령정무수석 비서관)에서 사사에는 한국의 역대 정권에서 정책에 흔들림이 생기고 있다는 것, 한일 관계에서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 특히 한국에서는 지도자의 언행이 국민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무엇을 양보할 수 없는지, 무엇이 다른지, 쌍방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이에서 출발해야한다”라고 주장했음. 박준우는 “미래지향을 강조한 한일 공동선언의 정신이 2005년 시마네현에 의한 ‘다케시마의 날’ 선언으로 훼손되었다는 것,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국 정부에 의한 재단 창설로 원 징용공 지원을 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으나,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아사히는 판결에 관한  
미국인 칼럼, 한일 대담,  
연구자 인터뷰를 게재**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대법원판결이 사법부의 판단이며, 한국 정부의 최종 판단과 대응을 기다릴 필요성과 국제재판에 부치는 일까지 생기는 않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시되었음

- 11월 23일에는 3명의 연구자에 관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음. 전직 고교 교사인 다케우치 야스토 근대사 연구가는 동원 실태를 보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 뒤 “불법적 식민지 지배로 인해 노동을 강제했음을 인정하고,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차세대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 현대사·현대 조일 관계사를 전문으로 하는 오타 오사무 도시사대 교수는 인권이나 인도적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시도가 국제적인 조류가 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나 기업들은 개인의 피해에 마주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과거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현대한국정치·외교를 전문으로 하는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부교수는 대법원판결이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모든 것이 위자료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사법부가 한 발짝 내디뎠다”라며, 그 이유로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한 ‘65년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대응은 “너무 지나치”고, 한국 여론을 자극해 한국 정부의 선택지를 좁힐 가능성을 제기했음. 그리고 “일본 정부는 너무 소란을 피우지 말고, 한국 정부의 행방을 기다려야 한다”라며 65년 체제의 틀을 깨지 않도록 한일 정상화 정치의 결단과 국내를 설득하는 지도력을 강조했다

### 3) 마이니치신문

- 11월 7일자 칼럼 ‘오사무의 눈: 힐난할 뿐 아니라’(전 교도통신·서울특파원으로 현재 저널리스트인 아오키 오사무)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근론’으로는 맞지만 “그냥 시끄럽게 한국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할 것들도 있다”라며, 한일 기본조약이 군사독재와의 “정치적 타협”이라는 점, 더구나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했음. 또한 “한일은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 나라”이며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한국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일 쌍방이 어떻게든 지혜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 15일자 해설 기사 ‘원 징용공 판결을 둘러싼 판결 한일에 찢린 가시’(전 서울특파원인 오오누키 토모코 해설위원)는 한국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대응과 일본 측의 냉정한 대응에 관해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흐름

**마이니치의 칼럼은 한국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일 쌍방이 노력할 것을 촉구**

과 이를 둘러싼 한국 국내의 치열한 보혁 갈등이 대법원의 판단 배경에 있으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거쳐 한국 사회 전체에 혁신적인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징용공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아, 한일 관계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판결의 심각성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나 판결이 예상되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사전에 대책을 짜오지 않았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 11월 17일자 칼럼 ‘주간 TV평: 원 징용공 판결 보도를 통한 생각, “쇼비니즘” 미국보다 일본이 중증이다’(TBS TV기자 가네히라 시게키)는 대법원판결에 관한 TV 보도가 ‘한일 간에서 이미 해결된 바 있다’ 혹은 ‘반일’을 언급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중 영합이라는 관점 밖에 없고 TV 보도가 ‘단색’이며 다양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일본 측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11월 28일자 해설 기사 ‘특집 와이드: 아베 정권의 환언(rephrasing) 체질’은 아베 수상이 ‘징용공’이라는 명칭을 그만하고 ‘노동자’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식민지 지배하의 강제노동이 아니라 노동조건에 납득하고 응모한 자유계약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해서 비판했음

#### 4) 일본경제신문 (닛케이신문)

- 11월 1일부터 ‘원 징용공 판결의 충격’이라는 연재 기사가 게재되었음. 제1차 기사(11월 1일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법뿐 아니라 정부 자체도 여론의 동향에 좌우되기 쉽다며, 배경에는 보수·혁신과 정치체제가 빈번히 교체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음. 문재인 정부가 보수파가 정한 역사를 재정의할 목적을 갖고 있지만, 북한과 ‘반일’ 구호를 내세울 가능성을 지적하며, 역사 문제가 국내 정치투쟁과 여론 사이에서 재생산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제2차(11월2일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대북 문제를 위해 연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에 강경책은 취하기 어렵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 제3차 기사(11월 3일자)는 경제산업성이나 국토교통성은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는 일본 기업이 한 곳이라도 나온다면 한국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관(官)과 민(民)으로 보조(步調)를 맞춰 한국 측에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비즈니스가 큰 기업에서는 경영 판단이나 주주들의 압력에 따라 배상이나 화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음
- 11월 11일자 칼럼 ‘한국은 “일국이제도(一國二制度)”인가’(전 서울지국 장인 미네기시 히로시 편집위원)는 역사 문제에서 반일운동의 깃발을 흔

**닛케이는 11월1일부터  
‘원 징용공 판결의 충격’  
이라는 기사를 연재**

들고 있는 것은, 원 징용공이나 원 위안부 본인보다 오히려 정권을 지지하는 좌파계 시민단체나 노조 등”이며 “박 전 대통령을 탄핵·파면으로 몰아가는 ‘촛불집회’를 선동한 실체는 소수세력”이라고 지적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민심’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서 국익이나 외교정책으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판단하고, 정치지도자에 의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11월 30일자 사설 ‘한국 정부는 조속히 대응책을 내세우라’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이나 대법원판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 양국 간의 지자체 교류 연기와 상공회의소의 회의 중단 등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우려하고 한국 정부는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대응책을 제시해야 하며, “일본은 주장을 견지하면서, 우선 상대방의 대응 방안을 지켜볼 때”라고 주장했음
- 12월 7일자 해설 기사 ‘외교 뒤집는 한국 헌법, 원점은 헌법’(미네기시 편집위원)은 “한국은 헌법에서 ‘반일’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서 이러한 헌법이 일본 기업에 대한 잇따른 배상명령의 근거로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이 일본의 판결을 “한국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다”라고 말한 점에 주목해, 노무현 정부가 원 징용공은 일본과의 협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조차 “한국의 헌법 가치”는 지워버리겠느냐고 주장했음
- 일본 경제신문은 주로 대법원판결이 한일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서 논조를 전개하며 문재인 정권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한국 측에 불만이나 불신감을 표명했음. 단, ICJ 제소 등 구체적인 강경책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닛케이**는 주로 판결이  
한일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5) 산케이신문

- 10월 31일자 칼럼(나무라 다카히로 서울지국장)은 대법원판결이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감정을 증시한 판결”이며 “법의 틀을 깨려는 국제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음
- 10월 31일자 칼럼 ‘산케이쇼’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일본에 닥친 “새로운 국난”이라고 표현하며, “국제적으로 봐도 괴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반일 자세를 선명히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반일색이 강했던 노무현 정권”은 좌파계 재판관을 차례로 지명한 데에 더해 “한국의 사법부는 여론에 빌붙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은 애초부터 기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음
- 11월 1일자 칼럼 ‘아비루 루이의 극언어면’(아비루 루이 편집위원)은, 대법원판결이나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 등을 “폭거”라고 표현하며,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폭거는 취하지 않는다. (중략) 무슨

- 것을 해도 반격해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을 깔보고 있는 것일 것”이라고 지적했음. 또한 “5가지 보복조치”를 언급하면서 “한국 측도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일본의 분노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음
- 11월 2일자 사설 ‘문 대통령의 연설, 대일관계는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서 대일관계는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고 있다”라며 “남북 유화로 독주한다면 한국은 국제적인 신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11월 4일자 칼럼 ‘한국에 2.5조엔 정도를 요구하면 어떨까?’(전 서울 특파원인 가토 다쓰야 편집위원)는 징용공들에 의한 소송이 “향후 세계에 전개되어 ‘일본은 인도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다”라며 “제2의 위안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이러한 사태를 피하고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대항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ICJ 제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이어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이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남긴 개인 재산의 절반가량을 한국에 청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주장했음
  - 11월 7일자 사설 ‘징용공 문제, 제소로 한국의 부당(不當)성을 강하게 호소하라’라는 일본 정부는 “부당 판결”을 방지하지 않고,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입히는 사태”를 불허하기 위해, 징용공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널리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며, 그 유효한 수단으로 ICJ 제소를 제기했음
  - 11월 8일자 칼럼 ‘한국에는 ‘법의 지배는 없는 것인가’(전 외교관인 미야케 구니히코)는 한국의 행정부가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면 얼마나 큰 한국의 국제적 신용 실추로 이어질지를 지적하며 “법의 지배로 이뤄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언동이 얼마나 기괴한지 한국 시민에게 자각시키는 것이 앞으로 필요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이 얼마나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인지를 호소해 나갈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11월 22일자 사설이나 칼럼에서도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한국이라는 주장을 볼 수 있었음
  - 11월 15일자 논고 ‘일본에 의한 ‘한국 제소’는 반석(盤石)인가’(후쿠이 현립대의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조선인 전시 노동에 대해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는 규정이 사실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신하는 것, 나아가 “한국에 대한 제재”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에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강경한 대항책으로서 ICJ 제소 등을 주장**

- 11월30일자 사설 ‘징용공 판결 폭거 제지하는 대항 조치를 서두르자’는 “한국의 불법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법인과 기업을 지킬 온갖 수단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사법부가 사실을 뒤틀고 폭주하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도 책임 있는 대응을 취하지 않고 반일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제대로 된 법치의 나라라고 할 수 없고, (일본과는) 안정된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음
- 산케이신문은 판결 직후부터 약속을 무시하는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한국이라는 관점에 역점을 두어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논고가 실렸고 강경한 대항책으로서 ICJ 제소 등이 주장되었음

### 3. 악화된 한일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제안

#### 가. 일본 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 고착화와 일본인과의 소통 필요성

- 중앙 일간지 각지가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전개했음.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나 외교 스타일, 대일 인식 등에 대해 일본 사회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반일’ 대통령이라는 일본 사회에서 이미지 고착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임
-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이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만, 소통 대상자는 한국 국민에 한정되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함. 일본 수상, 외교 관계자 그리고 일본 국민도 소통 대상자가 되어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수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나 한국 정부의 사고방식 그리고 한국인의 감정에 대해 일본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수상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과도 직접 소통해야**

#### 나. 일본 사회에서 對韓 감정의 다양성

- 중앙 일간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비판에는 온도 차이가 있거나 논리 구조에 차이가 있음. 일본 정부에 강경한 조치를 구하거나 문 대통령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는 논조가 있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를 감안해서 냉정한 대응을 한일 양국 정부나 국민에 호소하는 논조도 있음.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자기 성찰하면서 한일 대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논조

도 있음. 일본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공론은 다양성을 알 수 있음

- 일본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일본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공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다양성을 인식하지 않고 선입견(stereotype)이나 편견이 있으면 소통을 하더라도 한일 관계를 타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음. 서로가 가지는 악화된 감정을 재생산할 뿐이기 때문임

**다.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 일본 사회 안에서 인식의 차이**

- 중앙 일간지 보도가 잘 보여주었듯이 한일 간에는 식민지 인식, 다시 말하면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고 또, 일본 사회 안에서도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음
-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은 한일 간에서 존재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체결되었음. 한일 간에서 역사 인식이 차이가 있는 사실을 한일 서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적인 대립이 계속하고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불안정화가 심하게 되는 가능성이 우려됨
- 역사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한일 양국은 감정을 넘어 과거를 극복해서 협력과 발전의 미래를 서로 개척할 수 있는지, 한일 관계의 큰 지도를 그려낼 필요가 있음
- 일본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우호라는 슬로건을 부르짖더라도 한일 관계 개선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역으로 한일 양국의 여론에 반발을 일으키는 가능성조차 우려됨.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하더라도 현실은 1965년 한일 조약을 바탕으로 한 한일 관계의 ‘유통기한’이 지났을지도 모름. 그렇다고 하면 한일 양국에서 한일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획득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한일 관계의 큰 지도에 써넣어야 함. 그 지도를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지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한일 간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역사인식에 차이가 있어*

*한일이 양국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획득해야*

## 참고문헌

- i 여론(輿論)과 세론(世論)에 관한 논의를 참조. 『輿論と世論—日本的民意の系譜学』新潮社, 2008年.
- ii 「蓄積を無にせぬ対応を」『朝日新聞』2018年10月31日付.
- iii 「韓国最高裁の徴用工判決条約の一方的な解釈変更」『毎日新聞』2018年10月31日付.
- iv 「【主張】「徴用工」賠償命令抗議だけでは済まされぬ」『産経新聞』2018年10月31日付.
- v 「請求権協定を否定」『読売新聞』2018年10月31日付.
- vi 「編集手帳」『読売新聞』2018年11月1日付.
- vii 「文氏ちらつく反日」『読売新聞』2018年11月2日付.
- viii 社説「文政権は收拾策を早急に示せ」『読売新聞』2018年11月30日付.
- ix 「論点韓国は自ら締結した協定守れ」『読売新聞』2018年12月15日付.
- x 「徴用工」日本には遠慮せぬ国情」『朝日新聞』2018年11月1日付.
- xi 「私の論点日韓関係の正念場長期的視野で経済協力を」『朝日新聞』2018年11月8日付.
- xii 対談「日韓和解の誓い道半ば」『朝日新聞』2018年11月14日付.
- xiii 「元徴用工判決を考える」『朝日新聞』2018年11月23日付.
- xiv 「理の眼: なじるだけでなく」『毎日新聞』2018年11月7日付.
- xv 「論プラス: 元徴用工をめぐる判決日韓に刺さった棘」『毎日新聞』2018年11月15日付.
- xvi 「世論に揺れる韓国司法歴史問題再生産やまず」『日本経済新聞』2018年11月1日付.
- xvii 「ジレンマ抱える日本対北朝鮮で韓国と連携必要」『日本経済新聞』2018年11月2日付.
- xviii 「日本企業、賠償応じず」『日本経済新聞』2018年11月3日付.
- xix 「風見鶏: 韓国は「一国二制度」か」『日本経済新聞』2018年11月11日付.
- xx 社説「韓国政府は早急に対応策を示せ」『日本経済新聞』2018年11月30日付.
- xxi 「国民感情優先国際条約破る」『産経新聞』2018年10月31日付.
- xxii 「産経抄」『産経新聞』2018年10月31日付.
- xxiii 「阿比留瑠比の極言御免韓国に分かる形で怒りを示そう」『産経新聞』2018年11月1日付.

- xxiv 「【主張】文大統領の演説対日関係には言及なしか」『産経新聞』2018年11月2日付.
- xxv 「【加藤達也の虎穴に入らずんば】韓国に2.5兆円ほどを要求しては?」『産経新聞』2018年11月4日.
- xxvi 「【主張】徴用工問題提訴へ韓国の不当性強く訴えよ」『産経新聞』2018年11月7日付.
- xxvii 「【宮家邦彦のWorld Watch】韓国に「法の支配」ないのか」『産経新聞』2018年11月8日付.
- xxviii 「【主張】慰安婦財団の解散約束破る国と付き合えぬ」『産経新聞』2018年11月22日付.
- xxix 「【阿比留瑠比の極言御免】韓国の背中押す鳩山元首相」『産経新聞』2018年11月22日付.
- xxx 「【正論】日本の「韓国提訴」は盤石なのか」『産経新聞』2018年11月15日付.
- xxxi 「【主張】徴用工判決暴挙止める対抗措置急げ」『産経新聞』2018年11月30日付.

❖ 저자 약력

■ 고바야시 소메이(小林 聡明)

現 니혼 대학 (日本大学) 법학부 신문학과 부교수.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 (一橋大学) 사회학부 사회학 학사, 석사, 박사. 일본학술진흥회(JSPS) 특별연구원, 동경대, 메릴랜드대, 서울대, 고려대, 동서센터(East-West Center in Washington), 케임브리지대, 경희대 등에서 연구, 교육 활동함. 한반도 지역연구, 동아시아 국제정치사/미디어사를 전공함. 일본어로 된 주요 연구로서 『在日朝鮮人のメディア空間』(2007), 『メディアと文化の日韓関係』(2016, 공저) 등 논문 다수. 한국어로 된 연구로서 “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 (2018, 공저) 등 논문 다수.

## JPI 정책포럼 현황

- **한인택 · 김상규 · 고바야시 소메이** 『주요국 여론과 공공외교』  
(No.2018-07/08/09)
- **전혜원 · 김득갑 · 도종윤** 『지역간주의 관점에서 본 한-EU 관계의 발전 방향』  
(No.2018-02/03/06)
- **이성우 · 유동원 · 우준모**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No.2018-01/04/05)
- **조성렬 · 이삼성 · 한인택 · 전성훈** 『동북아 비핵시대: 한계와 가능성』  
(No.2017-09/10/11/12)
- **차태서 · 이용욱 · 정재원 · 도종윤** 『자유주의 이후 지역주의의 변화와 과제』(No.2017-01/02/06/08)
- **이성우 · 김진호 · 신정화 · 서동주** 『동아시아 주변 국가와 한반도 안보 위기』(No.2017-03/04/05/07)
- **고상두 · 신범철 · 황지환 · 도종윤** 『외교적 동반자관계와 한국외교』  
(No.2016-07/08)
- **도종윤 · 한병진 · 이성우 · 한인택** 『북한 정치의 동향과 대북정책의 평가』  
(No.2016-02/05/09)
- **김진아 · 신종호 · 이성우 · 이무성** 『미중관계와 한국 외교』  
(No.2016-01/03/04)
- **이성우 · 이영훈 · 우평균 · 홍양호** 『남북관계와 동북아협력』  
(No.2015-15/16/17)
- **도종윤 · 김홍중 · 이승주** 『지정학의 부활인가, 지역주의의 심화인가?: 동북아시아 지역질서 아키텍처의 현황』(No.2015-13/21/22)
- **이현미 · 고봉준 · 이성우 · 이수훈**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반도 평화』  
(No.2015-02/05/06)
- **이성우 · 이홍섭 · 김흥규 · 조세영** 『주요 양국 관계의 현황과 전망』  
(No.2015-01/03/04)
- **Carolina G. Hernandez · 한인택 · 이재현 · 최진우**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외교』(No.2014-23/24/25)

- **도종윤 · 이수형 · 진창수 · 박영길** 『한반도 평화통일과 주변국 관계』  
(No.2014-20/21/22)
- **한인택 · 이주홍 · 이선진** 『동북아 평화협력: 도전과 과제』  
(No.2014-19/26)
- **홍석준 · 이재현 · 신재혁**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획호』  
(No.2014-17/18)
- **니우린제(牛林杰) · 윤태룡 · 장준영 · 이성우** 『중국과 아시아의 평화협력』  
(No.2014-13/14/15)
- **서동주 · 유영철 · 고성윤** 『국제질서의 개편과 전략적 선택』  
(No.2014-12/16)
- **조태열 · 진행남 · 정재욱 · 이성우** 『신뢰외교 구축과 안보협력의 미래』  
(No.2014-09/10/11)
- **김태환 · 이신화 · 신범식 · 장노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한국의이니셔티브』(No.2014-06/07/08)
- **이성우 · 이상현 · 전재성 · 진행남** 『외교안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  
(No.2014-03/04/05)
- **하인즈 가트너 · 서동주 · 허태희** 『신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와 미러관계:특징과 전망』(No.2014-01/02)
- **배금찬 · 경제희 · 이정우** 『한·중·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  
(No. 2013-17/18/19)
- **신각수 · 김성한 · 서창록 · 조정현 · 신부남** 『한국외교의 방향과 현안』  
(No.2013-13/14/15)
- **조양현 · 신정화 · 고봉준** 『일본과 동북아 안보』(No. 2013-09/16)
- **주철기 · 진행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No. 2013-11)
- **유현석 · 이성우 · 김성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  
(No.2013-10/12)

## Public Opinions in the US and Public Diplomacy toward the US

**HAN In Taek** (Director of Research, Jeju Peace Institute)

As North Korea has developed nuclear missiles to the extent that they could threate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public has come to recognize the North Korean threat clearly and map out how to respond to it. Therefore, they can no longer be approached merely in terms of “knowledge public diplomacy” or “cultural public diplomacy.” It is time to carry out “policy public diplomacy” to communicate with them and coordinate the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According to an opinion poll, the American public seem to have a shared supra-partisan consensus abou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importance of the ROK-US alliance, and countermeasures needed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Even if the Democrats call the tune by seizing control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fter the midterm elections, they are unlikely to bring any unexpected change to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ccording to a survey, Americans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or a partial withdrawal of U.S. troop from the South as a compensation measure for North Korea’s nuclear disarmament; but remain lukewarm toward economic support for the North and disapprove of a total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should bear this in mind when engaging in negotiations to denuclearize the North and pursuing public diplomacy.

## Changes in Chinese Perceptions of Korea and Korea’s Policy in Response

**KIM Sang Kyou** (Professor,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Hanyang University)

Korea and China are closer to each other than any other in terms of cultural similarity, geographical proximity and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However, after the Korean War, they cut off bilateral relations. The reduction of military threats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accelerated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amid the post-Cold Wa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Korea and China were in need of bilateral cooperation since Korea had to improve inter-Korean ties through its northern policy to stabilize and unify the Korean peninsula, while China had to carry out its reform and door-opening policies. Such strategic motives led to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nd to a deeper economic interdependence through continued expansion of trade with and investment in each other.

While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m produced exponential growth, they started to experience friction and conflict. At the same time, historical issues worsened negative perceptions about each other. Furthermore, the security issue of a THAAD deployment almost dismantled the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seriously negative perceptions about each other are feared to worsen these ties further. China is a significant political and economic stakeholder, exerting a powerful influence on Korean peninsula issues. Hence, it is essential to assess the potential impact of the Chinese perception of Korea, and carefully analyze any surface changes. South Korea should examine the fundamental factors behind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Chinese public about Korea, and map out how to respond, accordingly.

## Japanese Social Sentiment about Korea: Public Opinions Mirrored in Mainstream Media on the Forced Labor of Koreans

KOBAYASHI Somei (Associate Professor, Nihon University)

Since the second half of 2018, especially after the ruling by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on compensation for the forced labor of Koreans by the Japanese, social sentiment in Japan about Korea has sharply taken a turn for the worse. This research paper analyzed the news coverage of the ruling by mainstream daily newspapers in Japan to find out the opinions of Japanese society about Korea. Major nationwide newspapers have criticized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government,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ir critical tone and rational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in Japan before starting to communicate with the Japanese people and engaging in public diplomacy.

As reported by the newspapers, there exists a gap between Korea and Japan in historical perception, with Japanese society remaining divided over the history issue as well. Hence, the two countries should acknowledge the differences and draw a roadmap that will allow them to get over indulgences in national sentiment about the past to the end of pioneering forward looking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hether the roadmap can be shared by Korean and Japanese societies remains a future task for both of them.

# Public Opinion in Neighboring Countries and Public Diplomacy

- ..... 3 <Opening Article> The Start of “National Diplomacy” and Its Path  
**KIM Joon Hyung**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 ..... 7 Public Opinions in the US and Public Diplomacy toward the US  
**HAN In Taek** (Director of Research, Jeju Peace Institute)
- ..... 22 Changes in Chinese Perceptions of Korea and Korea’s Policy in Response  
**KIM Sang Kyou** (Professor,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Hanyang University)
- ..... 37 Japanese Social Sentiment about Korea: Public Opinions Mirrored in Mainstream Media on the Forced Labor of Koreans  
**KOBAYASHI Somei** (Associate Professor, Nihon University)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